

## 인턴보좌관제 도입은 신중하게

대구시의회가 내년부터 의원 1명당 1명씩의 인턴보좌관을 채용하기로 했다. 뚜렷한 운영 방법도 결정되지 않아 절실한 필요성보다는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따라가고자 하는 느낌이 크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대안으로 각 광역의회가 인턴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출범한 이번 의회부터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유급제를 도입했다. 지난 의회보다 나아졌다고는 하나 크게 달라진 모습을 아직 찾아볼 수 없다. 의원의 겸직도 여전히 여전하다. 급조된 듯한 인턴보좌관제가 시급한지, 실효성 있을지 우려된다. 국회에서 도입한 인턴보좌관제 역시 실패라는 평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대구시의회가 모델로 삼으려는 서울시 의회의 경우 매달 100만원의 급여를 주면서 연간 9개월의 계약을 한다. 이같이 적은 보수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칫하면 본래적 의미의 의정활동 보좌역보다는 의원들의 잔심부름을 하는 개인비서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일부는 이미 사비로 개인보좌관을 채용한 의원들도 있다. 의원이

사적으로 채용한 보좌관의 급여를 보조해 주는 형태로 변질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게다가 서울 중구의회도 인턴보좌관제를 도입할 계획이니 우리도 도입하는 기초의회도 있는 모양이다. 지방의원 전원에게 유급 보좌관을 두면 광역의회 연간 약 300억원, 기초의회 약 1천1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중 211개(84%)가 재정자립도 50% 미만인 현실에서 지자체의 재정을 크게 압박하게 될 것은 뻔하다. 의회의 위상이나 잭팟에 관심을 보인 것이 아니라 활발한 의정활동 사례를 보고 배우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지방의회가 인턴보좌관제를 도입할 만큼 업무량이 폭주하는가도 의문이다. 현재 정책 및 입법지원을 하고 있는 전문위원을 늘려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지속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이양의 추진으로 업무가 많아지면 각 상임위별로 공동보좌관을 두는 제도의 시범적 운영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실효성 없는 인턴보좌관제의 도입은 세금 낭비, 비정규직 양산, 시민의 곱지 않은 시선 등 역기능을 가져올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선부른 인턴보좌관제 도입보다는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